386·구 민주계 약진…정동영·김근태계 퇴조

민주당 세력판도 재편…손학규계 "정세균 지지" 영향력 유지

민주당이 7·6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내 세력판도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손학규계, 정동영계, 김근태계, 구 민주계, 민주 통합파 등으로 나눠지던 당내 세력 구도가 상당 부분 허물어지고 386 세력이 당의 중심에 서는 한편, 구 민주계도 굳건한 응집력으로 기존 세력을 유지했다.

◇386 당 중심으로 우뚝=정세균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무난하게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계 386 전·현직 의원들이 힘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 386 의원들은 당 대표 경선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결집력을 과시하며 1위 송영길, 4위 안희정 최고위원을 만들었다. 여기에 구 민주계 386인 김민석 최고위원까지 배출하면서 지난 참여정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386 세력이 부활했다.

하지만, 이들 3명의 386 최고위원들은 손학규계, 구민주계, 친노계 등으로 모두 각기 발을 담고 있어 한 세력으로 힘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민주계 약진=구 민주계의 약진은 이변으로 평가된다. 구 민주계는 지난 2월 열린우리당계와 통합 당시 현역 의원 수로 따지면 10대 1도 안 되는 소수파였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2명을 최고위원에 진입시킴으로써 향후 당 운영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손학규계 세력 유지=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던 대부분의 세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대표를 위해 뜀으로써 손 전 대표 세력은 당내 주류로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더욱이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손 전 대표가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후보 중 3명이 당선됨으로써 막강한 당내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최고위원 경선 1위를 한 송영길 의원은 경선 초반부터 손 전 대표의 이름을 걸고 뛰었다. 또 3위를 한 박주선 최고위원과 5위를 한 김진표 최고위원도 손 전 대표 조직의 지원을 받았다.

반면, 정동영·김근태계 퇴조가 뚜렷이 나타났다. 두 계파는 열린우리당 시절 당을 양분하는 최대 규모였지만 양 진영의 대표격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문학진 의원이 낙선해 한계를 보여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세균(앞줄 가운데)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7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걸어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위장 박병석 사무총장 이미경 내정

민주당 오늘 당직 발표…비서실장엔 강기정

민주당의 새 정책위의장에 3선의 박병석 의원, 사무총장에 4선의 이미경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변인에는 최재성, 김유정 의원이 공동으로, 비서실장에는 강기정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오찬 등을 통해 이 같은 당직 인선 내용을 조율했으며, 8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병석 의원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 대표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정책에 두루 밝은데다 충청권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출신의 이미경 의원은 수도권 출신의 개혁 성향 중진으로, 개혁을 주도하는 데 적임자인데다 4선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호남 출신 대표,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 충청권 출신 정책위의장의 지역 구도를 갖추게 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계파 구분없이 업무능력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 지도부는 각각 여성과 영남 몫을 염두에 두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막판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성 몫으로는 이미경 사무총장 내정자가 겸직하는 방안과 함께 재선의 박영선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당 대표 경선에서 대결했던 추미애 의원에게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 몫으론 최철국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정서 대변하겠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과 정국 운영에 광주의 정서가 잘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 호남지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박주선 의원은 7일 "대한민국 정치는 광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광주의 선택은 지혜와 선견지명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 쟁점이 된 '탈호남'에 대해 "호남인에게 민주당 지지를 그만하라고 해야 하느냐. 민주당이 호남만을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한 뒤 "민주당은 호남인의 지지를 감사해야 한다. 호남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당내 시급한 사안으로 '화합'과 '정책 대안 제시'를 들었다. 그는 "구민주계와 열린우리계의 갈등은 당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서로 어루만지며 풀어야 한다"며 "과거를 잊고 미래와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우선 당직 인선 과정에서 포용과 화합이 되도록 능력과 자질을 보고 발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구호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며 "우수한 정책브레인을 그룹화하고 당내 연구소를 활성화해 정책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386 출신 3명이 선출되는 등 최고위원 구성이 젊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 소신이 있고 경륜이 있는 최고위원이 있다"며 "이들과 함께 중도개혁이 실천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성군의회 의장 김 상복씨

장성군의회는 7일 제 199회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김상복(51) 현 의장을 선출했다.

김 의장은 재적의원 8명 가운데 6명의 지지를 얻어 각각 1표를 얻는데 그친 강성주·박상곤 의원을 제치고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박광진(43)의원이 당선됐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전남도의회, 집행부 견제 나서나

후반기 의장단 강성 포진

7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한 제8대 전남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도청 집행부와 협조체제 구축에 방점을 뒀던 전반기 의장단과 달리 후반기를 이끌 신임 박인환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에 무게를 둘 것임을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의장 선거운동 때부터 "지금까지는 의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왔다"며 비판해왔다. 취임 소감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에 일부분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친 박의장 측'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상임위 위원장 구성도 집행부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다.

'친 박의장 측'에서는 부의장 1명과 기획재정위원장,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등 4명이 의장단에 포진한 반면 상대편 측은 제1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농수산환경위원장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지방의 離反 기억하라

김주정

정치부 부장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지방발전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청북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는 지방발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잘못된 규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라며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더 집중되면 인건비와 땅 값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도권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방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의 지방 발전에 대한 발언은 다음날에도 계속됐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지,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신산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에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혁신도시 재검토, 공기업 민영화 논란 등 혼란을 자초해 왔다. 여기에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개발, 선벨트 구상을 밝혀왔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내놓은 적이 없다.

대신 지난달 초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수도권 창업 기업에 대한 취·등록세 감경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완화에 이어 수도권 전역에 3천300만㎡ 규모의 임대산업용지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군사보호구역을 산단용지로 풀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조건 수도권 규제를 풀 계획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필요하다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말이 아니겠느냐"는 메아리가 돼 지방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지사협의회나,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같은 전국 단위의 단체 명의로는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도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데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우도 수도권 기업환경 개선책 발표 당시 시·도 명의의 반대 발언을 가급적 피했다. 언론에 그런 발언들이 실렸다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이렇게 하다간 한편으론 수도권 규제를 풀면서, 다른 한편으로 비수도권을 달래는 정부의 '양동작전'에 당할 수 있다.

정부도 '촛불 민심' 이전에 혁신도시 재검토에 반발한 '지방의 이반(離叛)'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jjnews@kwangju.co.kr

호 소 문

광주미래는 광주기아조합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기아를 사랑하는 광주시민 일동